

# 중동 리스크에 '3고' 고착화... 실질소비 회복 5년 걸려

## ■ 광주연구원, '미국-이란 전쟁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유가 급등에 산업·소비 위축  
단기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도

공급망 안정·산업고도화 전략  
광주·전남 공동 대응 체계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광주·전남 지역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 비용 상승을 넘어 산업구조의 취약성까지 노출된 만큼, 중장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연구원은 28일 광주정책포커스 제 29호 '미국-이란 전쟁의 지역경제 영향'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이 지역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이 약 60% 급감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57.66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는 곧바로 에너지·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국면을 촉발했다. 광주와 전남의 생활물가도 각각 2.2%, 2.5% 상승하며 체감 물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충격도 적지 않다. 국제유가가 20% 상승할 경우를 가정한 분석에서 광주

·전남의 산업별 산출액은 에너지 산업이 1.2% 감소하고, 가공조립업 0.64%, 기초소재 0.59%, 모빌리티 0.3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33% 상승하고 실질 소비는 0.6% 감소해 단기적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실질 소비 회복 시점이 향후 20분기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은 내수 위축의 장기화를 시사한다. 문제는 충격의 확산 속도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가 '저물류·저내수·저성장'의 3저 흐름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64.9%가 해상운임 상승과 공

급망 차질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 둔화가 맞물리며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보고서는 △주력 산업 긴급 방어(공동구매·비축, 에너지 비용 지원, 제조업 납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민생 및 골목상권 안정(생활비 모니터링,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비용 절감 및 디지털 전환) △공급망·위기 대응 체계 구축(산업·물류·물류 통합 관리, 광주·전남 공동 거

버넌스) △친환경 에너지 중심 산업 재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전쟁 충격은 단순한 외부 변수의 파급이 아니라 지역산업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계기"라며 "비용 지원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 에너지기업, 동남아 뚫었다... 600만달러 수출협약

코트라와 '솔라텍 인도네시아' 연계 시장개척단 파견  
신아이엔에스 등 6곳...태양광·전력기기 상담 확대



전남도는 지난 25일까지 1주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에너지 특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600만달러(약 89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도가 동남아 에너지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인도네시아에서 600만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이끌어냈다. 현지 전 사회와 연계한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실질 계약 기반을 확보하면서 지역 에너지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 25일까지 1주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에너지 특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600만달러(약 89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추진됐으며, 동남아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Solartech Indonesia 2026'과 연계해 운영됐다. 현지 전시회 참가를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과 계약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기업 6개사를 선별하고, 행사 이전부터 현지

바이어와 최소 두 차례 이상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등 계약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단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신아이엔에스는 건물과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는 차열도료 제품으로 현지 바이어와 4건, 총 6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온 기후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 특성이 현지 수요와 맞물리며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더조은에너지, 에이스에너지, 인버터기술, 에스앤에스, 디엔티 등 참여 기업들도 태양광 구조물과 발전장치, 전력기기 분야에서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 계약 가능성을 확보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어 관련 산업 진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연계해 바이어 관리와 추가 상담, 계약 체결 지원 등

단계별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해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시장"이라며 "수출기업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코스피, 장중 6700선 돌파...이틀 연속 최고치

SK하이닉스 신고가  
코스닥은 소폭 하락

코스피가 28일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1.77p(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해 25.99p(0.39%)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한때 6712.73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틀 연속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3570억원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850억원, 136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인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49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62%), 현대차(5.92%), LG에너지솔루션(1.72%) 등은 올랐고 삼성전자(-1.11%), 두산에너빌리티(-0.8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06%) 등은 내렸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 중 132만 8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13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0p(0.86%) 내린 1215.58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58p(0.05%) 오른 1226.76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개인이 홀로 796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5290억원, 기관은 258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안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본격 가동

국토부, 참여기업에 현대차·A2Z·라이드플러스 선정  
E2E AI 기반 기술개발...광주 전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정부가 광주를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200대 규모 전용 차량을 투입해 E2E(End-to-End)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도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미래차 산업 선점을 위한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E2E(End-to-End)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

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현대자동차, 오도모, 머스아이투지, 라이드플러스가 선정됐다. 현장 평가는 K-CITY에서 골목길 등 복합 도심 환경 주행 능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도시 단위 실증'

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주 전역 500.97km를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특정 구간이 아닌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여기에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제시된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구상을 접목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투입한다. 기술 개발과 제도 실험을 병행해 상용화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실증을 맡는다. 완성차 기반 기술 고도

화, 대중교통 서비스 전환, 물류 자율주행 등으로 역할이 나뉘며, 도시 전반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조다. 현대자동차는 레벨2+ 주행보조와 레벨4 자율주행용 동시 개발하며, 자회사 42dot의 AI 플랫폼을 양산차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도모·머스아이투지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 'Roiu'를 앞세워 전국 14개 지방정부에서 축적한 운행 경험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전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이드플러스는 고속도로 화물운송 등 물류 분야 실증을 확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험운전자 동승 방식에서 상반기 중 완전 무인 운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증도시를 단순한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산업 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8일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강장진 한국생산업본부인증원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 광주은행, 안전보건 'ISO 45001' 인증 획득 글로벌 표준 체계적 관리 역량 입증...ESG 강화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8일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강장진 한국생산업본부인증원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의 글로벌 표준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인증이다.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체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지속적인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증 과정에서 'ISO 45001' 및 'KS Q ISO 45001' 규격에 따른 세부 심사 항목을 우수한 수준으로 통과했으며,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동안 광주은행은 사업장 내 고객과 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임직원 대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안전 점검, 위험성 평가, 개선 조치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안전보건 경영은 당행이 추구하는 핵심 경영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계기로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업역 폐지로 시장 왜곡...즉각 폐지해야"

전문건설업계, 국토부에 40만명 탄원서 전달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에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도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회장 및 업종별 협의회장단, 기계설비협회 회장단 등 대표단 30여명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국 전문건설인들의 호소가 담긴 총 40만8391부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무너

진 건설산업 생태계의 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업계 대표단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경계를 허문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중소 전문건설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현행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국 전문건설인들의 호소가 담긴 총 40만8391부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4억3000만원 → 10억원 상향), 보호구간 일몰제 폐지 및 연구회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전남도회는 회원사 수(4000여곳)의 8배에 달하는 3만2000여부의 탄원서를 모으며 전국 최고의 참여율과 응집력을 증명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